

요약 및 정책건의

1 연구 개요

1.1 현행 민간전문가 참여제도의 한계

- **[정책일관성]** 단위사업별 민간전문가 운영체제로 운영되어 정책 및 사업 간 유사사업내용에 대한 조정 및 정책 일관성유지 곤란
- **[책임성]** 개별 위원의 책임이 불분명하고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정책 및 사업 추진력 제약
- **[권한]** 외부전문가의 사업집행권한 부재 및 자문 중심 권한 부여로 인한 실행력 미흡
- **[전문성]** 분야별 다양성·전문성 증가로 다양한 방식의 정책 및 사업 아이디어 부족

1.2 새로운 민간전문가 참여제도의 도입 필요

- **[정책일관성]** 단일사업을 종합적 관점에서 총괄·조정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구축 필요
- **[책임성]** 사회적 명망가 1인 전담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책임성 확보 및 신속한 업무처리 중요
- **[권한]** 1인 민간전문가에게 적절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여 주무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, 행정적 실행력 확보 바람직
- **[전문성]** 다양한 전문 인력의 도입으로 행정체계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정책 설계 합리화 요구

주요 연구결과

2.1 서울형 책임민간전문가 도입 기본방향

2.1.1 서울시정에 적합한 서울형 민간전문가 참여모형 개발

2.1.2 민간전문가 간 유기적 협력구조 도입

2.1.3 권한과 책임의 균형적 배분

2.1.4 시범실시 후 시정분야 확대적용

2.1.5 책임민간전문가 참여 표준조례안 마련

2.2 서울형 책임민간전문가 도입유형

2.2.1 정책기획 및 종합사업 총괄형 : ‘서울형 정책기획 커미셔너’(SPC_ Seoul Policy Commissioner)

1) 개념 및 적용분야

- 서울시 분야별 정책 및 사업의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,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서울의 정책분야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로서 가칭 ‘서울형 정책기획 커미셔너’(SPC_
Seoul Policy Commissioner)로 명명
- 도입가능분야는 도시 및 건축분야(도시디자인, 도시경관, 공원계획 등), 환경보전, 축제총괄, 교통정책, 안전·재난관리 분야가 가능

2) 중대규모 정책 및 특별시책 총괄

- 해당 분야 주무부서장 등과의 유기적 관계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
- 해당 분야 서울시 시책을 파악하고 관련 사업 간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서울시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 및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
- 주무부서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통해 특정 분야 중점관리 시책사업을 선정하여 중점관리

- 관련분야 예산 및 사업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중점관리 사업선정과 사업 간의 연계, 사업내용 조정 권한
- 3) 정책결정단계에 집중 참여
- 목표 및 비전, 사업 우선순위 결정, 사업예산 조정, 종합사업계획 등 정책 기획 및 주요의사결정단계에 중점 참여
- 4) 지원조직의 구성
- (지원조직체계 1안) 별도 지원단체계
 - [특징] 별도의 국장급 지원단장 임명 시에 관련부서 간 효과적인 협조가 가능하여 서울형 정책기획 커미셔너의 행정실행력 확보 및 일관된 정책 집행이 가능
 - [한계] 서울시 국장급 지원단 신설 시 국장정원을 늘릴 수 없는 현행법상 한계 존재
 - (지원조직체계 2안) 주무부서별 TFT 구성
 - [특징] 주무부서장 중심의 지원팀 구성으로 행정업무와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관련 분야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전문적 관리 용이
 - [한계] 주무부서 중심으로 지원팀이 구성됨에 따라 타 부서와의 협력 과정에서 어려움 존재

2.2.2 단위사업 총괄형 : ‘서울형 사업총괄계획가’(SPM_Seoul Project Manager)

1) 개념 및 적용분야

- 서울시 관련 분야별 단위사업에 대한 기획부터 집행, 평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하고 관리하는 전문가로서 서울시 적용 시 가칭 ‘서울형 사업총괄계획가’(SPM_Seoul Project Manager)로 명명
- 도입가능 분야는 뉴타운 및 재개발, 지역축제, 마을만들기 등

2) 중소규모 개발사업 총괄

- 사업기획단계 : 특정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방식, 사업추진체계 구성
- 사업집행단계 : 사업변경사항 및 전반적 추진사항 검토, 지역주민의 참여 적극적 유도 및 의견 조율
- 사업평가단계 : 정책 및 사업의 평가, 모니터링, 정책 및 사업의 후속조치, 차기사업에의 반영

3) 정책 및 사업집행단계 집중참여

- 종합사업계획에 따른 단위사업계획 수립, 사업집행 총괄관리, 협의조정 등의 정책 및 사업집행단계에 집중적 참여

4) 서울형 사업총괄계획가의 지원은 관련부서에서 직접 수행

-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지원조직을 만들어 사업총괄계획가의 활동에 필요한 보조행정 및 업무협조

2 3 **서울형 책임민간전문가의 자격조건**

2 3 1 **기본역량**

- ① 전문지식과 경험에 기반을 둔 총괄기획력
 - 해당 시정 분야의 정책 및 사업에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
- ② 공정성 및 도덕적 윤리의식
 - 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특혜의혹 방지를 위해 공공성과 투명성에 기반을 둔 업무처리
- ③ 균형감 있는 소통 및 조정 능력
 - 여러 부서 간에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조율하고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
- ④ 헌신성
 - 서울시 도시 공간 및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한다는 자세로 헌신적인 참여
- ⑤ 변화관리 능력
 -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제도나 행태의 신속한 개선 또는 개혁 필요 시 능동적으로 대처 필요
- ⑥ 네트워킹 능력
 - 필요한 인적·물적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킹 능력 필요

2 3 2 **전문역량**

- ① 자격조건
 -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된 자격증이나 학위 등을 소지
- ② 경력조건
 - 해당 분야에서 상당기간 유관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가능

2 4 **서울형 책임민간전문가의 선정방식**

2 4 1 **선발위원회(Search Committee) + 비공개 지명 위촉방식**

- 사회적 명망가의 자율성과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 직접초빙·위촉하는 방식으로 선발위원회(Search Committee)를 구성해 적격자에 대한 평판 등 심도있는 검토와 검증을 통해 적격자를 초빙

2 4 2 **공모방식**

- 선출방식에서 투명성 제고 및 정치적 영향력 배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계획안 공모를 통해 적합한 민간전문가 선정

2 5 서울형 책임민간전문가의 책임과 의무

2 5 1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본연의 의무를 다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공표 누설불가

- 서울시 관련분야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대외비 등 중요 정보 접근권한이 커지므로 이권개입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비밀공표 누설불가 의무부여

2 5 2 재임기간 중 서울시 내의 관련 분야 사업수행 및 참여 제한

-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관련분야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함에 따라 서울시 관 내의 관련 분야 사업수행 및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

2 5 3 수행기관 선정 및 평가단계에서의 역할 최소화

- 막대한 권한부여에 따른 권력남용에 대비하여 정책 및 사업단계별 권한을 일부 제한하거나 사업선정 및 평가에서 역할 및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

2 5 4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시스템 구축

- 서울형 정책기획 커미셔너 개인의 선호에 따른 독단적 결정을 견제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장치 마련

2 6 서울형 책임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

2 6 1 근무시간 기준이 아닌 사회적 지위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접근

- 서울형 정책기획 커미셔너로 임용되면 관련 분야의 공공프로젝트 및 여타 사업 참여기회가 제한되므로 보수는 근무시간에 대한 기준이라기보다 민간전문가 직을 유지하는 동안의 기회비용으로 접근

- 262 **사회적 지위 및 민간근무경력을 고려하는 보수체계 수립**
- 공무원경력 중심의 연봉책정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기업 및 연구소 등의 근무경력도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여 연봉책정 시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
- 27 **서울형 책임민간전문가의 근무형태**
- 271 **비상근직이 바람직하나, 서울형 책임민간전문가 역할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확보 의무 부여**
- 비상근 근무형태를 적용하여 노동의 유연성을 유지하되, 임용 시점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에 문제가 될 만한 대외활동은 제한하는 것이 필요
- 28 **서울형 책임민간전문가의 임기**
- 281 **2년 정도의 별도 임기를 두고 최대 2년 연임규정 마련**
- 2년 임기 후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최대 2년 연임 가능
 - 전문가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학계나 연구소의 안식년 임용방식 상 2년 정도의 외부파견이 가능한 점을 고려
 - 서울형 사업총괄계획가는 단위사업의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시장이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해 임기를 달리 규정 가능

3.1 유형별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도입

- 정책기획 및 사업총괄형 민간전문가 도입으로 단위사업총괄형과 연계하여 특정 분야 사업 간 조정 및 연계로 정책 및 사업내용에서 일관성 유지

3.2 서울시정에 적합한 서울형 민간전문가 참여모형 개발

- 서울시 현실을 고려하여 서울시정에 적합한 서울형 민간전문가 참여모형 개발 필요
- 정책분야, 내용, 규모 및 범위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범위가 차별화됨에 따라 다양한 민간전문가 참여유형이 존재
- 국내 민간참여모형(CP, PD)의 운영사례를 볼 때 내부 인사조직권 한계, 적용가능 분야 제약 등의 한계 존재

3.3 시범실시를 통한 제도안정화

- 우선 적용 가능한 시정분야를 발굴하여 시범실시 선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가능한 분야에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 바람직

3.4 민간전문가 참여 표준조례안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

- 정책 및 사업분야별 다양성이 큰 서울시정의 현실을 고려하여 자격조건, 선정방식, 보수, 지원조직 체계, 근무형태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부서별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

- 3 5 **민간전문가 참여 활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시스템 마련**
- 3 5 1 **책임민간전문가 의견반영 필수절차 도입**
- 서울형 책임민간전문가는 정책 및 사업기획단계에서 관련 부서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전에 중복사업을 배제하고,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
 - 관련분야의 사업에 대해 서울형 정책기획 커미셔너의 사전 검토의견서가 첨부되어야 시장의 결재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해 실질적 권한 부여
- 3 5 2 **책임민간전문가 전문보좌 지원시스템 구축**
-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 상의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의견수렴절차 등을 위한 협의체 조직 및 운영
- 3 5 3 **기존 공무원과 융화 시스템 구축**
- 공무원들이 민간전문가 제도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제도에 대한 지속적 교육이 필요
- 3 5 4 **우수한 민간 전문인력 유치 방안**
- 최고의 민간전문가 임용을 위해서는 기존 공무원 체계와 다른 보수시스템 구축 및 계약만료 후 신분제에 관한 혁신적인 비전제시가 필요
 - 서울시 내부 전문인력 관리시스템과 안전행정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우수 전문가 풀 확보
 - 분야별 학회, 유관기관·단체 등에 적격자의 추천을 요청하는 등 능동적 인력추천 및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인재 임용